

第234回国會
(定期會)

教育委員會會議錄

第 1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9月5日(木)

場 所 教育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李揆澤 委員

교육과정평가원장 사퇴 관련 질의

□내부보고서

교육인적자원부 담당부서에서 교육부총리께 보고하기 위해 평가원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내부 보고서는 근·현대사 검정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바뀐 과정, 제작 절차, 기술 내용, 직권수정 지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서 내용만 보면 공무상 기밀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일상적인 내용입니다.

□비밀누설

형법 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밀누설죄로 기소되더라도 법원의 판단은 사안에 따라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지난해 김홍일 의원 제주방문 동향보고서를 우리 당에 유출했던 제주경찰서 정보과 형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선례도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우리 당 전문위원이 요청해 해명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기밀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두며 선례를 보더라도 비밀누설죄로 수사한다는 것은 무리한 수사임이 자명합니다.

□질 의

이번 수사는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본보기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치졸한 보복수사입니다.

이런 정도의 문서를 공무상 기밀유출이라고 하

는 것은 지극히 관료주의적 발상이며, 공직기강 차원에서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자체조사 후 징계처리하면 될 사안을 청와대가 나서서 직접 수사를 지시하고 사퇴압력을 가한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총리께 물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는 부총리께서 잘못된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왜 사과했냐고 호된 질책을 받자 책임을 평가원에 떠넘기기 위해 대통령친인척비리를 수사해야 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동원해 치졸한 보복극을 펼쳤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청와대는 김성동 전 원장의 사퇴 이유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 실패라고 하는데 왜 이제 와서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인지?

그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제 문제를 삼는다면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국가 중대사인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평가원장의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사퇴시킴으로써 11월 6일 실시될 대입 수능시험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부총리께서는 이것이 비밀도 아니고 보복수사라는 점을 인정하시면 관계기관에 김성동 전 원장의 수사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美卿 委員

교육부의 근·현대 역사교과서 수정·보완 기본방향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된 근·현대 역사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진행되고 있음. 사건 발생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국사편찬위원회 과 현직 역사교사, 출판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 폭넓게 수렴하며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번 조치가 여러 관계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검인정 역사교과서로 전환한 기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단일 국정 역사교과서 체제가 자칫 획일적이고 협소한 역사관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딱딱한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반감시킨다는 반성이 있어 검인정 역사교과서 체제로 도입했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정·보완 과정이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됩니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점을 충분히 유념하여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동 평가원장 사임과 관련하여

- 저는 지난 상임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이번 사안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마치 정쟁을 하듯 정당 간에 다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번 김성동 평가원장 사임과 관련해서도 몇몇 언론에서 사실과 기사를 통해 현 정부가 마치 기획, 표적 수사를 한 것처럼 과장 보도를 하고 있으나 김성동 평가원장의 사임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 김 평가원장은 지난해 수능난이도 조절실패,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한 연합학력평가 채점 오류, 이번 교과서 사건까지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았음.
또 이번 교과서 사건에서는 총리에게 보고도 되지 않은 공문서를 특정 정당에 유출한 사실이 밝혀짐. 이는 그 자체로 범법 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 말기 정치권에 줄대기 급급한 공직자 기강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더구나 김 평가원장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 사건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로 일관하여 고위 공직자로서의 소명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
- 이러한 김 평가원장의 행태로 보았을 때, 김

- 평가원장에 대한 징계조치나 수사는 매우 당연했으며, 이 사안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그것이 정쟁의 도구로 다시 활용되는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현재 김 평가원장은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공문서 유출이 범법이 되고 비리가 있다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벌에 처하고, 업무 진행과정에 징계사유가 있다면 마땅히 징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답변서)

○副總理兼教育人的資源部長官 李相周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

(黃祐呂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전문분야와 무관한 4명의 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검정위원을 선정하고 검정위원을 비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 변)

- 선정위원회는 검정위원 인선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이며, 선정위원회 심사 시 검정위원 후보자의 세부전공, 연령, 출신대학 등 다양한 판단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각 교과목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한정된 인적자원으로 선정위원회와 검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앞으로는 각 교과목별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함.
- 검정위원 비공개원칙을 고수한 것은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제도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검정위원 공개를 포함한 검정제도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

(李揆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한국 근·현대사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떠넘기기 위해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동원해 보복극을 펼쳤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관계기관에 김성동 전 원장의 수사중단을 요청할 의향과
○청와대는 김성동 전 원장의 사퇴이유를 수능시험 난이도 조정실패라고 하는데 교육

부가 그 당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제서 문제를 삼는다면 직무유기가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김성동 전 원장에 대한 경찰 조사는 제가 판단하기 곤란함을 말씀드리며,

-관계기관의 수사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동 수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김성동 전 원장은 작년 11월, 2002학년도 대학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었고,

-올해 6월 시행한 전국 고교 연합학력평가 채점오류가 발생되었으며,

-최근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검정과 관련하여 다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3학년도 대학수능시험 등 국가 위임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해임을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질 의)

수능시험을 관리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았음에도 사퇴 시킴으로써 대입 수능시험(11월 6일)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 변)

○금년도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이미 발표한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능 난이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수능시험 출제·관리체제 개선방안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 완료사항

-상시전담 출제지원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34명) 보강 : 02. 6.

-계약제 재택 출제위원(5개영역 총 290명) 위촉 : 02. 6.

-수능시험의 고교현장 연계를 위해 고교교사 6명을 파견 : 02. 7.

-수능 모의평가를 1회 실시 : 02. 9. 3.

* 향후 추진사항

-출제위원에 교사(20%) 참여 확대 및 출제위원 위촉 시 대체 강사료 지급계획

○이와 함께 지난 9. 14. 신임 평가원장(충남대 이종승)이 국무조정실 인문사회연구회에서 임명되었으므로 향후 수능과 관련한 평가원 업무도 조기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李美卿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질 의)

최근 문제가 된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수정·보완은 검정교과서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 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부는 검정제도의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 근·현대사의 수정·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의 경우도 수정·보완을 위한 기본방향만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수정·보완은 집필자와 출판사가 집필방향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도서를 발행하여 학교현장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검정제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